

“서비스업 R&D투자, OECD 최하위”

현대경제연구, 한국 투자 비중 8.5%로 英 6분의 1수준... 인력 비중 17.9%로 유럽 선진국에 크게 뒤져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전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취업자 등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5년 50%대 초반에 머물렀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취업자 비중은 2015년 기준 각각 59.7%, 69.7%까지 상승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및 취업자 비중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향후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서비스업 역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양적 투입과 R&D 투자가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투자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R&D 투자 규모는 45억8000만달러,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8.5%다.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의 경우 비교 대상인 OECD 33개 회원국(총 35개



중국 소비자의 날 앞두고 주한미군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 중국 당국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와 중국 소비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한 가운데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 중국인 대상 상점과 환전소가 보이고 있다.

회원국 중 라트비아·룩셈부르크 제외) 가운데 꼴찌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격차는 더 크다. 영국의 서비스업 R&D 규모는 153억8000만달러, 투자 비중은 58.2%다. 한국에 비해 투자 규모는 3배 이상, 투자 비중은 6배 이상 많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한 독일(13.2%)과 일본(10.0%)의 서비스업 R&D 비중도 한국을 상회한다.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 R&D 인력 비중 역시 한국은 17.9%로 영국(56.1%), 프랑스(50.7%), 이탈리아(33.8%) 등에 비해 상당히 낮다.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서비스업 R&D 예산을 증대해 민간 R&D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제

조업 내에서 서비스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개발서비스, 의로서비스,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문·고급 R&D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서비스업 혁신을 위해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지닌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부채 한계가구’ 5가구 중 1가구꼴

지난해 200만 가구 19.9%... 외환위기 수준 적용 때 33.6%

부채를 보유한 5가구 중 1가구는 금융권 빚을 제 때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신용평가가 부채를 보유한 전체 1086만355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달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고 나면 가계가 마이너스(-)에 놓이게 되는 한계가구는 지난해 기준 20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19.9%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추산한 한계가구 비중 12.5%보다 7.4%포인트나 높다.

일반적으로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며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

중이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지만 한신평은 이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계가구를 분류했다.

더욱이 부동산 가치 하락, 소득 수준 저하, 금리 상승 등 과거 외환위기 수준을 적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는 금융부채 보유 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이 3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유진 연구원은 “한계가구로 분류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적용 시 한계가구로 편입되는 가구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더욱 많은 가구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

미래부,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빅데이터의 활용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빅데이터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획·검증 및 실증·확산 단계로 구분해 9개 과제에 총 39억원을 지원한다. 참여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은 자유 공모를 원칙

으로 하되, 사회적 중요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교통, 보건 의료, 재난 분야는 지정 공모로 추진한다.

미래부는 과제 선정 기관 중 주요 데이터 보유 기관에 대해 해당 분야 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주도하는 선도기관인 ‘미래부 지정 빅데이터 센터’로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안내서는 오는 15일부터 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6일 진흥원 서울사무소. /뉴스

사교육비 정부조사 ‘엉터리’ ... 근본대책 필요

지난해 1인당 월 25.6만원... 방과후학교비·EBS 교재구입비 등은 포함 안돼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가 실제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액수가 반영되지 않아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 방법의 보완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포함한 고등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2000원인 반면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9000원으로 격차가 약 2배 가량 벌어졌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통계 발표시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학부모들이 실제 지출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부모에게는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이기 때문에 다음 조사 때부터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사교육비 조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학부모들은 과목당 25만원, 5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은데 월 사교육비용 26만원선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실소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등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1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가폭도 최고치를 찍었다. 2013년과 2014년 3000원씩, 2015년 2000원이 올랐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만2000원이나 경증 된 것이다. 지난 한 해 사교육비 증가액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3년 간의

사교육비 증가액의 합산(8000원)보다 많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1000억원으로 2009년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사교육비 총액마저 증가세로 돌아섰다. 초·중·고 학생수가 전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17조8000억원) 1.3% 증가했다.

대학서열화로 인한 입시 경쟁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많은 수험생의 부담이 줄고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에서도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학서열화 완화와 해소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재계, 정부에 세무조사 규모 축소 요구

재계가 정부에 외환위기 수준의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과감히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인합수 국제정상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작년 대비해 건의 숫자가 늘어나고, 건의 내용도 다양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국제청에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부담 완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연도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년 1만7033건 ▲2015년 1만7003건 ▲2016년 1만7000건이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심분 이해하지만 IMF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줄여달라는 것이다.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도 구조조정이나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일반세무조사는 국제청에서 조사 시작 열흘 전에 통지하게 되어 있고, 납세자는 재해나 질병 등 제한된 경우에만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결산,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세무조정 등을 1~3월에 모두 마쳐야 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뉴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